

## 광산구·여수시, 제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서 의결  
급격한 고용 악화 전 선제 대응책  
고용유지지원금·생활자금융자 확대  
근로자·기업 고용안전망 확충 기대

지역 산업 붕괴로 급격한 고용 악화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가 국내 최초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양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돼 급격한 고용 악화 전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전남도·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산구는 2023년 말 시작된 대우위니아 주요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대형화재로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여수의 경우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광산구와 여수시를 향후 6개월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 2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두 지역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북적이는 JOB 매칭 페스타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2025 하나 JOB 매칭 페스타가 열린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구직자가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주최하고 광주 서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광주경영자총협회 등이 협력한 이번 행사는 4050 경력직 구직자에게 채용 기회 제공과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왔지만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뒤에야 지정이 이뤄져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피보험자 증가율 전국 대비 5%p 이상 감소 ▲피보험자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률 20% 이상 증가 ▲사업장 수 5% 이상 감소 등 4개 요건 중 3개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광산구와 여수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도입

됐고 광산구와 여수시가 첫 수혜 대상이 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제적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다.

그동안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종사자 2천300여명과 광주지역 160여개 협력사의 불안, 인근 상권 침체, 연쇄적 고용 위기가 광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해 왔다.

전남도도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4월30일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5월26일 현지실사를 마쳤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광산구와 여수지역 근로자·기업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와 자격 요건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자 지원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비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대(300만원→500만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2천만원→2천500만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1천5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1천만원→2천만원) ▲국민취업제도Ⅱ 소득요건 면제(중위소득 100% 이하→지정일 전 3개월 이후 퇴사자 소득요건 면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수당의 66.6%→80%, 1인/1일 6만6천원 한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보험료의 100%→130%)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겐 총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통해 기존 보증료를 1%에서 0.8%로 확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해 3억원 한도로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석유화학·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협조와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광산구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고용 활성화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환영 입장문을 통해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소악의 전환점이 되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고용 불안을 겪는 근로자들과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전남의 고용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이국근 기자

## 도,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속도 낸다'

정부 5극3특 전략일환...장기적 행정 통합도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6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국가 균형 발전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관련 기사 3면

이와 함께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등에 도정

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영록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 상황을 토대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해온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

편하기로 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전남도는 이른 시일 내 광주와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

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는 27일 오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개최기로 했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 자원에 대한 맞춤형 특례를 담은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이 도민이 체

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 전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 Today

기획-글로벌이주허브 광주전남대전환... 5면

배춧값 폭등 '기후플레이션' 현실화 12면

KIA, 9월 홈 14경기에 가을야구 달렸다 16면

###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25 8.30.-11.2.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주최/주관: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  
Hosts: Gwangju Metropolitan City / Gwangju Biennale Foundation

### 2025 광주 방문의 해

축제가 온다! 즐거움이 온다! 민주가 온다!

빛이 온다!

세계인이 온다!

###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9. 5. ~12.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2025. 9. 22. ~28.

광주광역시  
GWANGJU CITY